

2025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순경 공채 >

- [필수] 해양경찰학개론(01), 형사법(12)
- [선택] 해사법규(04), 헌법(05)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양경찰청

8.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해양경비법」 제14조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다음 중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 ④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10. 다음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와 관계기관의 장을 짝지은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 외교부장관
- ②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 해양경찰청장
- ③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 국토교통부장관
- ④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 행정안전부장관

11. 다음 중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취유인 및 방화사건의 경우 갑호 수사긴급배치 사건에 해당한다.
- ② 중요 상해치사 및 국보급 국가유산 절도사건의 경우 을호 수사긴급배치 사건에 해당한다.
- ③ 을호 수사긴급배치 시 경력동원 기준은 형사(수사) 요원, 형사기동정요원은 가동경력 100%,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 단,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기, 특공대 등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 ④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12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12.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③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④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13.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단독 소관 법률을 나열한 것이다. 그 제정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해양경비법」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14.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일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 ㉢ 14세 미만(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최초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해선(海船)(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해선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과 항공기의 승무원 중 기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선박의 무해통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외국선박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의 육지 쪽에 있는 내수에서 무해통항을 할 수 있다.
- ④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18. 다음 <보기> 중 시체의 후기현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자가용해
 - ㉡ 미라화
 - ㉢ 백골화
 - ㉣ 시체 얼룩(시반)
 - ㉤ 시체 밀랍(시랍화)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임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③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일의 전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④ 임용일자는 소급되지 않는다.

20. 다음은 「국가재정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① 계속비 ② 예비비
-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형사법

1.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 ② 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③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 중 상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③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 ④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다.
- ②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③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 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절도예비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4. 다음 중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D정당의 시당위원장인 甲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평소에 안면이 있던 기자 E에게 제공하여 그 허위의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 ③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제1항 직권남용감금죄)
- ④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소유의 창고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게 하여 영득한 경우(절도죄)

5. 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6. 다음 중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은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 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 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7. 다음 중 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의 내용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8. 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청구한다.
- ③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乙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乙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 ②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11.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다음 중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 ②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 ③ 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 주인이 잠가둔 셔터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3.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범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 (O) ㉡ (O) ㉢ (X) ㉣ (X)
- ② ㉠ (O) ㉡ (X) ㉢ (O) ㉣ (X)
- ③ ㉠ (X) ㉡ (O) ㉢ (O) ㉣ (X)
- ④ ㉠ (X) ㉡ (O) ㉢ (X) ㉣ (O)

14.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 ②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기사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기사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15.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16. 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③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 ④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 ㉣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사법규

1.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원법」에 따른 선장의 직접 지휘 상황을 제외하고, 선장은 법이 정한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따른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제외)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②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 흘수, 기관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 중 B깃발에 따른다.
- ④ 3급 도선사의 면허 등급에 따른 도선 가능한 선박의 종류는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이며,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총톤수 300톤의 내항어선은 관제대상 선박이다.
-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국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 ㉡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긴급피난의 신청·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자로부터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③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만 한다.
- ④ 관할관청이 유선사업의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 ②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 ③ 해양사고 구조
- ④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8.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 ②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해수면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운항 횟수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9.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 법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가로 90cm, 세로 70cm 붉은색 천으로 된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 ④ 정선명령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로 여기서 ‘단음’은 1초간, ‘장음’은 4~6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는 것을 말한다.

10. 다음 <보기>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음향신호와 발광신호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총 합은 얼마인가?

< 보 기 >

- ㉠ 길이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장음: ()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 ㉢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회
- ㉣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 ① 38 ② 28 ③ 37 ④ 27

11. 다음 <보기>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신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신고 운반하는 선박이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신고 운반하는 선박이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경우,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여야 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2천톤을 신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출수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어선의 검사 중 특별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를 의미한다.

13. 다음 중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선박의 선장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한다면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시행하는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14.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사관의 직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 ② 재결의 집행
- ③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 ④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사고 관련 기술적 자문

15.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 ②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③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용기포항, 강진항, 성산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연안항이라고 한다.
- ④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16. 다음 <보기>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 안에 내용을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중에 배출할 것
-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 이하일 것
- 기선으로부터 ()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 ① 정류, 30리터, 30해리
- ② 항해, 30리터, 50해리
- ③ 항해, 15리터, 30해리
- ④ 정류, 15리터, 50해리

17.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여 따른다.
- ②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 ③ 경비수역에서 해양경찰관은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등 해양 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테러예방 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②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에 따라 확정한다.
- ③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④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19.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3장 항로 및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안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③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 ④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벌칙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 ②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 ③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 ④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헌법

1. 다음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발의한다.
-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음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 ②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 ③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 ④ 민주주의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4. 다음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 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③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5. 다음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향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② 1년 이상의 징역 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6. 다음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인 바, 여기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7. 다음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③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8. 다음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③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이용자의 흡연권이 동시에 제한된다면, 이는 기본권의 경합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9. 다음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 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10. 다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②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③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 피고인인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④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다음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적도인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③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12. 다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에 불과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②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13.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 ④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14. 다음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중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②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가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16. 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
- ③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17.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직업결정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④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8.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국가배상법」은 동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②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④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20. 다음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